

9급 모의평가 사회

이용재(서울대 법대 졸업, 現 스카이에듀 법과사회·정치·경제 대표강사, 前 메가스터디 법과 사회·정치·경제 대표강사, 前 EBS 대표강사)

문 1. (가), (나)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가) 문화인, 문화 생활, 문화 상품권
(나)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청소년 문화 |
|--|

- ① (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기계와 같은 문화 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가), (나)의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 ④ (가)와 달리 (나)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해설] (가)는 발전되고 품위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다. 반면 (나)는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다. 기계와 같은 요소는 편리성의 의미, 미개로부터 발전된 것을 의미하므로 (가)의 문화에 당연히 포함된다.

- ① (가)의 문화는 (나)에 비해 좁은 의미이다.
- ③ (가)와 (나) 같은 형태의 문화는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 ④ (가)가 발전된 것과 미개한 것, 품위와 천박함을 구분하는(우열을 가리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한 반면 (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②

문 2.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u>새로운 내용</u> 으로 수정되었다.
--

- ① 사적 자치의 원칙
- ② 계약 공정의 원칙
-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해설] 밑줄 친 '새로운 내용'은 근대민법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현대 민법의 원칙들을 의미한다.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모두 근대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현대 민법의 원칙들이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과 배치되는 근대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3. (가)~(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가) 재판 청구권, 청원권
(나)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
|---------------------------------------|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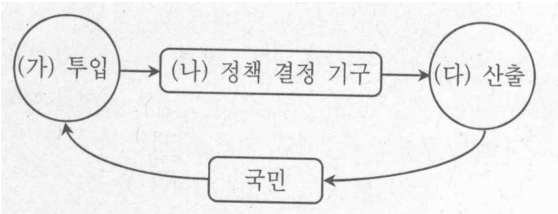
- ① (가)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 ②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③ (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 ④ (나)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인 반면, (다)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해설] (가)는 청구권적 기본권, (나)는 사회권적 기본권, (다)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 ③ 자본주의의 문제점의 완화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
- ④ 자유권적 기본권이 다른 이의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성격을 띠는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을 띤다.

[정답] ①

문 4. 다음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는 (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오늘날에는 (나)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가)는 (다)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해설] 권위적인 정부(독재정부)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입 단계가 없어도 정책이 결정되어 산출단계에 이를 수 있다.

- 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은 (가)의 투입단계에 해당한다.
- ② 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 ③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기관 중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경제 상황에 개입하는 등 '행정부 비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답] ④

문 5. 사회 이동 유형인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세대 간 이동
(나) 세대 내 이동
(다) 구조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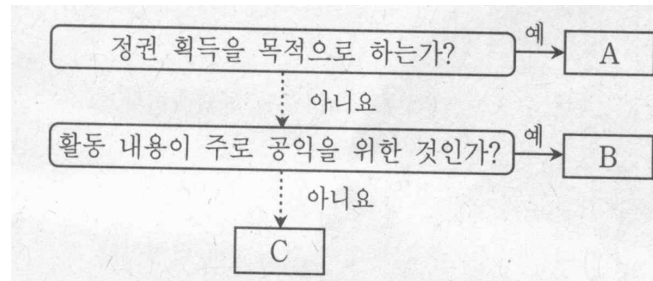
-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가)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를 경험할 경우, 그의 사회 이동은 (가)에도 해당한다.
- ③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는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는 허용되지만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가), (나), (다)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해설]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이동을 '세대 간 이동', 기타 한사람의 일생 내의 이동은 '세대 내 이동' 으로 볼 수 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 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이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 ① 부모와 자식을 분석하여 세대 간 이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세대 간의 이동과 세대 내의 이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즉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가난해지면 세대간 이동인 동시에 세대내 이동이 된다.
-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며(개인적 이동에 해당 없음)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정답] ③

문 6. 다음 그림은 정치 행위 주체를 A~C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A~C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중의 하나이다)



- ① A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B는 그렇지 않다.
- ② A는 특수한 영역에, C는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 ③ A, B, C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
- ④ C는 A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해설]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정당', 공익을 추구하는 B는 '시민단체', C는 '이익집단'에 해당한다. 정당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 반면, 이익집단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 ①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시민단체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 ③ 정당과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두 국민의 의사를 모아 여론을 형성한다.
- ④ 정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이익집단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문 7. 다음 상황에서 A재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A재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였다.

- 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 ②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불변이다.
- ③ 균형 가격은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 ④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설]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100씩 수평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 거래량은 100만큼 증가하지만 곡선의 수직 방향의 이동은 없었으므로 균형 가격은 불변한다.

[정답] ④

문 8. (가) ~ (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 ① (가)는 대상자의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사회 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상 기초 노령 연금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해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국가가 부조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나)의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① (가)는 대상자가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 ②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제도는 (가)의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강제되는 그런 제도이므로. (나)는 필요한 대상자를 국가가 선정하여 부조하는 제도이다.
- ③ (가)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나)는 국가가 필요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정답] ④

문 9.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목 :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개시
1.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① ㉠의 장(長)은 ㉡의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 ② ㉡은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다.
- ③ ㉡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지닌다.
- ④ ㉢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효력은 20일 후에 발생한다.

[해설] '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 ①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 ③ 조약은 법령의 위계질서에서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④ 발효와 동시에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문 10. 다음 표는 A, B, C재 가격이 각각 10%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A재	B재	C재
판매수입 증감률(%)	-10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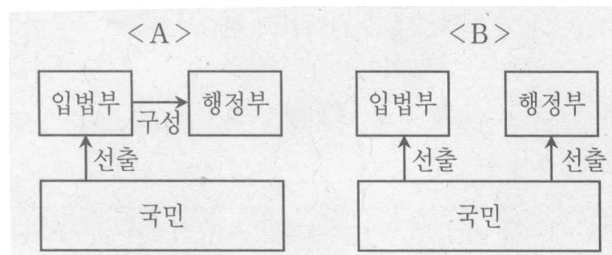
-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 ③ B재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다.
- ④ C재 수요는 가격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이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 인상 시 판매수입이 감소하며 비탄력적인 재화는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A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B재는 단위 탄력적, C재는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C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가 전무하여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률과 판매수입의 증가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100원짜리 제품 100개 판매 에서 110원으로 가격 오르면 완전 비탄력일 때에는 수량이 여전히 100이므로 10000원의 수입에서 1100의 수입으로 10% 변화한다.

- ① A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라면 가격 인상과 함께 수요가 0이 되므로 판매수입 증감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
- ② B재는 단위 탄력적인 재화이므로 탄력성이 1이 된다.
- ③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경우, 수요량도 함께 변화하며 판매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답] ④

문 11. 다음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구별되는 B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 ②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④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해설] A는 국민이 뽑은 입법부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형태이다. B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모두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구조상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상의 일심동체이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없는 반면, 대통령제 하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법권의 독립은 두 가지 정부형태 하에서 공통적으로 보장된다.
- ② 의원의 각료 겸직은 의원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 ③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정답] ④

문 1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기업에서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 친목 도모 활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 ① ㉠은 공식 조직에,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② ㉠과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로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③ ㉡은 ㉠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④ ㉡은 ㉠과 달리 구성원 간 수단적인 관계보다는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해설] 기업은 입사에 시험 등의 자격절차가 부과되고, 퇴사도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므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다.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로 볼 수 있다.

- ① 기업은 공식 조직,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다.
- ③ 기업과 같이 사무적이고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조직에서는 인간 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 동호회와 같은 친목 위주의 조직이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 ④ 동호회는 구성원 간의 친목이 주가 되는 반면 기업은 구성원들이 수단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

[정답] ②

문 13. 다음 대화에서 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이 아닌 것은?

갑 : 사회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을 :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제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 ① 사회 변동은 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②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
- ③ 사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④ 사회 문제는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내부의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해설] 을은 '사회 유기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이다.

- ① 유기체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유기체 내의 구성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단계이다.

- ② 변동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는 것은 갈등론이다.
- ③ 유기체론은 사회도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조화로운 전체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본다.
- ④ 유기체 내부의 병리적 현상이 자체적인 회복 시스템을 통해 치유되는 것처럼 사회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

[정답] ②

문 14. 다음에 제시된 사회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계량화와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와 변수간의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여 일반화, 나아가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
- ②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 ③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한다.
- ④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해설] 제시문은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며 사실과 가치는 엄격하게 분리된다.

- ② 실증적 연구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그에 따라 연구 방법도 일원화 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다른 것으로 보는 입장은 해석적 연구방법이다.
- ④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문 15. 다음 표는 갑국의 GNP와 GDP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GNP	100	100	100
GDP	100	110	120

- ① 2009년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0%이다.
- ② 2010년과 2011년 갑국의 GDP 증가율은 동일하다.
- ③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 요소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된다.

[해설] GNP는 국민총생산, GDP는 국내총생산이다. 갑국의 국민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량이 매년 동일한 반면, 갑국 국경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량은 매년 10억 달러씩 증가했다. 외국기업이 갑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러한 GDP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① 물가 상승률을 알기 위해서는 명목과 실질의 관계가 주어져야 한다.

- ② 2010년에는 10/100, 2011년에는 10/110만큼 증가였으므로 증가율이 동일하지 않다.
- ③ GNP는 갑국 국민의 해외 생산과 국내 생산을 합친 것으로, 해외 부문만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문 16. 밑줄 친 ㉠ ~ ㉣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한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 ②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 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답] ③

문 17. 다음 표의 A ~ D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유	무
경합성	유	A재	B재
	무	C재	D재

- ① A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 ② B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 ③ C재의 소비 과정에서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④ D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A재는 일반적인 사적 재화, B재는 공유자원, C재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유료 인강과 같은 재화, D재는 공공재이다. B재와 같은 공유자원은 누구나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소비될 수 있다.

- ① A재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다.
- ③ 무임승차의 문제는 도로나 공공서비스 같은 공공재의 소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 ④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의해 최적 거래량 및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②

문 18. 다음 A,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쫓아와 이를 피하려고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 B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어깨를 한 차례 밀쳤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당했다.

- ①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A의 행위는 위법성, B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 ③ A, B의 행위는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④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A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피난,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A(주거침입죄)나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B(상해죄)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의 순서이므로)

- ① A의 행위는 개라는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② A와 B의 행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 19.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현 시점(5월)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구분	3월	4월	5월
원/엔	100	110	115
원/달러	1,600	1,500	1,400

-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
- ② 결혼 기념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온다.
- ③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
- ④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

[해설] 원/엔 환율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즉 엔화의 가치가 증가한 반면 달러화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다면 엔화가 더 비싸지기 전에 일본 여행을 서둘러 다녀오는 것이 좋다.

- ① 엔화가 비싸지고 있으므로 엔화로 표시된 외채는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미룰수록 실제 지불해야할 금액이 증가한다.
- ③ 달러화는 싸지고 있으므로 미국산 부품대한 달러결제는 달러화가 더 싸지길 기다려도 늦지 않다.
- ④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다.

[정답] ②

문 20. 다음 표는 갑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2010	48%	32%	20%
2011	42%	28%	30%

※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노동가능 인구}} \times 100$

- ① 실업률은 불변이다.
- ②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 ③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 ④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해설] 실업률은 ‘실업자/경제 활동 인구’ 공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 노동 가능 인구,
 취업자+ 실업자=경제 활동 인구라는 공식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2010년의 실업률은 32/80=40%, 2011년의 실업률은 28/70=40%이므로 변화가 없다.
 ② 2010년의 고용률은 48%, 2011년에는 4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③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에서 30%로 증가하였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80%에서 70%로 감소하였다.
 ④ 2010년과 2011년의 노동 가능 인구수가 같으므로 취업자는 48%에서 42%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